

# ‘5G 과징금’ 사상최대說... 이통사 “시장위축 큰 타격” 울상

이번주 단통법 최종 협의안 발표  
예상 과징금 규모 700~800억원  
이통사, 재발방지대책 등 선처 호소

이동통신3사가 5G 가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규모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오는 10일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가 단통법 개정 방향을 최종 협의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단통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5G 관련 불법보



서울 강남구 SM타운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인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금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원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침체 등

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이 과열되자 4개월 간에 걸쳐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방통위가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8년 506억원이다. 예상치가 맞다면, 역대 최대 과징금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하고, 이동통신사가 5G 설비 투자 등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타격을 클 수밖에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지난달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5G 초기 가입자 확대 필요성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방통위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다. 초기 5G 상용화 보급에 힘쓸 때 보조금 지급도 이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5G 가입자는 연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 19 악재로 목표치도 하향 조정됐다. 자칫하다 5G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 방향을 협의한다. 오는 10일 토론회에서 그간 협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지원금 규제 완화,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규제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단통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방식 등이 달라질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온투법 D-50’ 부실 P2P 업체 걸러낸다

부정 발견시 업계 위축 우려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변수’  
영세업체, 감시인 선임 난항

다음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 업체 ‘전수조사’와 각 회사의 ‘준법 감시인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온투법 시행 전후로 국내 P2P업체 240여 곳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격 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만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P2P 업체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답답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8월 등록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사 중 대형업체의



/유토이미지

부정이 발견되면 P2P 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P2P금융업체 임원은 “수 년 간 노력 끝에 이제야 겨우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다”며 “혹시라도 대형 업체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다면 업계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수는 ‘준법 감시인’의 선임 여부다. P2P 업체들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상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

상 근무 ▲금융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조교수 이상 5년 종사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형 P2P 업체들은 잇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임 여부를 공개한 곳은 어니스트 펀드, 펀다, 넥핀, 모우다 등이다. 아직 준법감시인 선임 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업체는 “기존 내부인력 중 요건에 맞는 인물이 있어서 온투법 등록 전에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세 업체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한 관계자는 “1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 안에 선임을 못 하는 업체는 자연스럽게 대부업체로 돌아가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석 기자 ysl@

## 한투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 원금 70% 지급

조건 없이 14일 일괄 지급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0%에 대한 선 시간을 두고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투증권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옵티머스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원금 70%를 오는 14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헤르메스 전문투자 제1호(167억원) 뿐만 아니라 만기가 내년 1월 예정인 옵티머스가우스 전문투자 제1호(120억원) 투자자까지 모두 선지급 받게 된다.

나머지 금액은 펀드 자산 실사 결과를 지켜본 후 오는 9월 말까지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신속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이번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달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시작됐다.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현재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만기가 남은 상품을 감안하면 추가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만 2500억원가량에 달한다.

/송태화 기자 alvin@

## 한전, 플러그만 꽂으면 전기차 자동 충전

한국전력공사가 보다 편리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전력은 7일 전기차에 충전 플러그를 연결만 하면 사용자 인증 및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Plug and Charge(플러그 앤 차지) 충전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플러그 앤 차지’ 충전은 전기차를 충전기와 연결하는 즉시 전기차에 저장된 차량 정보와 결제 정보를 이용해 별도의 사용자 확인과 결제 단계 없이 간편하게 충전하는 방식이다.

기존 충전방식은 충전시 회원카드 인증이나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해 사용자가 충전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됐지

만, 해당 충전은 충전기에 꼽기만 하면 사용자 인증 및 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내년부터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 전기차 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공용 급속충전기에 해당 기능을 우선 적용할 계획으로, 내년이면 사용자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향후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보안통신 인프라를 민간 충전사업자나 전기차 제조사에게도 제공할 것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연구원에 구축된 실증용 ‘Plug & Charge’ 전기차 충전소. /한국전력공사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3년까지 자동차 시장의 7%까지 늘어 연간 54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이 제공하는 보안통신 인프라를 다양한 사업자가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스마트충전, V2G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저축銀 정관변경 등 신고절차 명확하게 개정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앞으로 저축은행의 정관 변경이나 지점 이전 등 신고사항과 관련한 처리 절차가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저축은행과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경우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 등을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한 뒤 서류가 수리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상 저축은행의 해산과 영업 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 신고가 면제된 저축은행의 정관·업무의 변경사항은 신고필요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유리 기자 yu115@